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 방향

주강현(문화재전문위원)

I. 머리말

전통이란 무엇일까? 본 발표에서는 무엇보다 민속문화의 요체이기도 한 무형의 문화가 지니는 본질적인 힘을 주목한다. 가령, ‘민속’이란 이름의 개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근대 풍속의 해체와 새로운 풍속의 생성이란 지난 100년간의 사회역사적 변동 속에서 현존 민속개념 가지고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민속은 진부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法古勗新’하여 새롭게 재해석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속’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민속은 세계화시대의 대안의 하나이며, 민중의 생활문화는 시민사회의 또 다른 대안이 되는 탓이다. 봉건성에 안주하는 전통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문화산업화가 국가전략적 목표가 되고, 전통의 진실된 보존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산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의 가치는 학문의 내적 틀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으로 총화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에는 죽음의 문화에서 삶의 문화로 나아가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통과 현대의 조화, 유교적 경학(經學) 중심이 아닌 기학(氣學)으로의 전환, 남성중심이 아닌 여성문화로의 전환, 분단에서 통일문화로의 전환, 글자문화에서 시각문화로의 전환, 육지에서 바다로의 전환, 지자체에 따른 지역문화의 활성화

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무형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적 화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다. 첫째, 유형중심에서 무형으로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무형문화의 보고인 농민문화, 무형문화의 파행과 굴절을 통한 신문화권력의 위상을 살펴본다. 둘째, 세계화와 통일문화에서의 전통이란 측면에서 세계화의 에스닉의 양면성, 북한에서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전통을 재점검해본다. 셋째, 하나의 작은 사례로서 농촌문화전통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다루어본다. 변화하는 세시풍속과 지방화시대와 지역전통문화의 주체확립 등이 그것이다.

II. 유형중심에서 무형으로의 전환

1. 무형문화의 보고인 농민문화

제3세계는 다양한 무형유산, 가령 춤이나 음악, 종교의식이나 공예, 구전문학 따위의 쓰여지지 아니한 문화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유럽의 주요 박물관이 '약탈박물관'이란 말이 나오듯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유형적 재화만을 보물창고식으로 이끌어온 유형중심사고는 제3세계의 문화현실과는 상반된다.

1993년 제14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인간문화재제도보급'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 채택되도록 하고 1996년 '무형문화재 보존방법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최근 세계구전문화유산제도(Masterpieces of Oral Heritage of Humanity) 도입을 제154차 집행이사회(1998년 5월)부터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사업이 종래의 유형문화유산 일변도에서 무형문화유산 쪽으로 점점 더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하나의 문서에 합의하였다. 유네스코는 2년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대해 아리랑상(Arirang Prize)을

설립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향서를 서명교환하였다.

무형문화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자산이다. 아프리카 민중들이 고기잡으면서 부르는 노래, 중국의 민중들이 명절날 즐기는 춤, 안데스산맥의 산자락에서 쟁기질과 추수를 감사하는 의례, 폴리네시아 민중들이 망자를 천도하는 종교의식, 자연의 변화에 따라 즐기는 다양한 축제들, 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들, 짚과 풀로 엮은 소소한 공예품들, 수를 놓아 예쁘게 짠 카페트와 호화찬란한 옷감들, 천연의 재료로 빚은 독한 술...

제1세계적 관점에서 제3세계적 관점으로의 전환논리 속에는 바로 유형적 관점에서 무형적 관점으로의 전환, 거대한 정치권력 중심의 문화에서 평범한 민중의 문화로의 전환이라는 전환시대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전환시대의 논리는 귀족중심의 문화관에서 민중중심의 문화관으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21세기 시민사회의 문화관으로 미래지향적 문화관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유럽 제국은 바로 그 소중한, 인간중심의 무형의 문화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제3의 나라들이 그들 유럽중심의 문화관을 따라가고 반복하고 학습해야 하는가? 이제 제3세계 민중의 눈, 무형중심의 눈으로 세계문화를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농민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이와 같은 무형적 사고의 재정립과 직결된다.

2. 무형문화의 파행과 굴절

조선시대 의례를 중심으로 무형문화를 구분할 경우에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국가권력에서 관장한 무형문화다. 국가에서 ‘무형문화정책’을 전담해 온 역사는 실로 오래다.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사』지(志)를 보면, 예(禮)에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가례(嘉禮), 악(樂)에 아악(雅樂)·당악(唐樂)·속악(俗樂)을 망라하였으니 국가적인 행사에 무형의 문화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상층부에서 유교통치원리에 의한 예악(禮樂)을 중시하였으니,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에서 무형문화가 사상문화적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20세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묘제례악

따위가 대표적인 국가 무형문화였다. 이 같은 상태는 일제침략 직전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둘째, 지역단위 향촌에서는 별도의 무형문화가 존재했다. 중앙권력의 예악을 이어받아 향촌에서 향촌문화권력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향촌의 토착의례와 결합하는 이중적인 방식을 보여주었다. 조선왕조의 지방사회에서 읍치를 중심으로 편성운영된 군현체제는 단순한 행정 구역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지방민에게 군현체제는 하나의 생활권이며, 그들이 중앙정부와 만나는 최고의 단위였다. 그러나 읍치의 의례는 읍치에 거주하면서 관역을 세습해온 향리들의 이해를 강하게 반영하였다. 가령 20세기까지 이어진 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는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읍치 문화가 민간신앙과 결합된 데서 비롯되었다.

셋째, 읍치를 벗어나 마을단위로 가면 마을공동체적인 풍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마을단위의 무형문화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동계 전체가 하나의 마을굿을 행하던 경우와 달리 촌마다 마을수호신을 독자적으로 모시는 경향이 늘어났다. 양반들은 이를 음사(淫祀)라고 비판하였으며, 음사에 대한 대비책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삼강행실도』·『소학』 등의 윤리서와 향사례, 향음주례의 보급운동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마을굿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는 데서도 촌계(村契)의 독자성은 뚜렷했다.

무형문화를 바라보는 국가의 입장과 민중의 입장이 일치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국가와 읍치 통치이데올로기로 유교적인 의례가 존재했다면, 민중의 의례는 별도로 존재했다. 국가적인 의례와 민중의 의례는 늘 갈등관계로 병존하였으며, 국가적인 의례가 지방 관아에 요구되었음이 분명하나 읍치의 의례는 토착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없었다. 중앙의 의례와 읍치의 의례, 민중의 의례는 상호 연관성 속에서 때로는 탄압을 가하기도 하고, 타협과 절충을 모색하면서 병진·발전해 왔다.

수공예분야의 무형문화도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녔다. 중앙에서 관장하던 공장(京工匠), 지방 관아에 소속된 장인,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민중들 스스로 이어져나간 장인이 존재했다.

첫째, 국가적인 수공예는 이미 국초에 『경국대전』에 공식적으로 목록화되

어 공표되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경공장만해도 비단, 초립, 사개갓, 사모, 갓, 도투리, 실끈, 망건, 모자, 종이, 직조, 옥, 독, 옥관자, 은그릇, 금박, 가죽, 신말, 돛자리, 털옷, 조화, 담요, 입사, 옷칠, 두석, 맷돌, 활시위, 도료, 놋그릇, 거울, 바늘, 갑옷, 악기, 조각, 먹, 구리, 붓, 죽제품, 도장, 목수, 대장장이, 구슬, 매듭, 분, 향, 말안장, 다래, 빗솔, 부채, 아교, 저울, 채찍, 제기, 염색, 활자, 시계, 미장이, 석수, 기와, 벽돌, 구들, 수레, 우산, 삿자리, 밭, 석회, 물통, 초, 갓바치, 질그릇, 상자 등 무려 140여종에 달하였다.

둘째, 읍치에서 관장하던 수공예가 별도로 존재했다. 가령 오늘날 통영지방에 유달리 전통수공예가 많이 전승되고 실제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은 해군기지였던 통영을 중심으로 읍치의 지방수공예가 발달한 탓이다.

셋째,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수공예는 자급자족적인 생활용품의 제작으로부터 조선후기에 정착된 5일장에 내다 파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주를 차지하였다. 조선후기는 특히 민간수공업의 전성시대였다.

즉, 중앙권력의 직접적인 관장하에 있던 무형의 문화, 지방 관아에서 지방 권력과 중앙권력의 상호 긴장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던 무형의 문화, 마을 단위에서 이어지던 무형의 문화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 결합한 채로 이어졌다.

일제침략은 이 같은 층위가 무참하게 와해됨을 의미했다. 중앙권력에 의탁 하던 궁중음식이라거나 종묘제례악 등만 잔재를 남겼을 뿐 다수가 사라졌으며, 관아의 혁파로 인하여 읍치의 무형문화도 대개 사라졌다. 다만 일부 잔존된 상층부문화와 마을단위로 전승되어오던 무형문화만이 일부 존재할 뿐이었다. 중세사회의 무형문화가 일정한 단계를 밟아서 근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파괴적인 단절을 겪었으며, 무형문화의 다양한 층위가 파괴된 채 지리멸렬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일제는 일찍이 전통문화정책에서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유형의 문화유산은 대상의 역사성과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 자체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었으며, 동산문화재 같은 개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일제는 무형의 문화에 대해서는 일면으로 한갓 습속·기속 따위로 모멸을 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이 같은 민의 풍습을 연구조사 함으로써 식민지통치에 유리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문명개화한 나라들의 선진적인 세계관은 사회진화론과 맞물리면서 무형적 가치관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제1세계의 식민화는 문자사회집단의 무문자 사회집단에 대한 지배와 통치라는 일반적인 도식을 밝아왔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에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전통적인 무형의 문화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몇 십 년을 흘러갔다. 막말로 ‘알아서 전승하든 말든’ 국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해방 이후 20세기가 다하도록 우리의 역대정권들은 창조적인 문화정책을 가져본 일이 없다. 문화정책의 이 오랜 부재는 역대 정치권력이 ‘문화’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사회발전과 문화의 연맥관계’에서 정의해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에 결정적으로 연유한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능력의 결핍 때문에 20세기 후반 정치권력의 인식체계 속에서 문화는 거의 언제나 불요불급한 장식적 활동부문 정도로만 간주되고 적극적인 정책적 과제가 되기 어려운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오랜 인식마비의 전통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중세사회가 와해되고 식민지를 거쳤으며, 민족 분단시대로 접어들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모색하면서 근대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혀 새로운 틀을 짜야만 했으나 무형문화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화정책이 있다면, 오로지 서양 것을 수입하거나 극장 따위의 건물을 몇 개 짓고 음악회를 몇 편을 올리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우리 문화는 찬밥신세였다. 수많은 전통예인들은 거리를 방황하면서 호구지책에 급급하였고, 전통 수공업자들은 공장제수공업에 밀려서 사양산업으로 밀려났다. 이것이 1950년대까지의 우리문화 풍경이었다.

그러다가 군사정권으로 출발한 제3공화국은 ‘의사민족주의’ 정책으로서 정권의 민족적 취약성을 보완할 양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창설하고 무형문화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으로는 산업화의 대두에 따른 무형문화의 소멸, 급격히 인멸해가는 무형문화를 계승시켜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무형문화정책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그 법제적 기준은 일본 문화재법을 고스란히 복사해오는 방식이었다.

전통시대의 문화층위가 와해된 상태에서 새로운 층위를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중앙문화와 지방문화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했던 균형감도 깨진 상태에서 오로지 중앙집중문화 방식으로 문화정책이 구사되기 시작하였다. 읍치문화가 지녔던 향촌문화의 독자성이 와해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중앙문화 따라하기' 풍조만이 성행했다. 군사정권의 중앙집중적 속성은 문화적 중앙집중도를 더욱 조장하였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국민 속예술경연대회를 여는 방식 같이 군사문화적인 '속도감'이 창출되었다. 속도와 효율성은 증산·수출·건설 시대의 화두였으며, 무형문화정책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지방 군소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향토축제가 선보였는 바, 미인 뽑기대회·글짓기대회 따위의 천편일률적인 행사로 가득 찼을 뿐 어떤 지역적 전통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기형적인 전통은 사실 일제시대에 조장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촉진되었고, 군사정부 아래서 적극 권장되었다. 그 결과 20세기말까지 지방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개의 지역축제들은 천편일률적인 내용물과 관에 의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선보일 뿐,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이어주는 문화의 전통성은 약하다. 일본이 마쓰리라는 지방축제를 현대화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꾀하는 사례와 대비된다.

이 같은 문화환경 속에서 건수식, 투망식 연구와 조사, 그에 따른 문화재 지정이 촉진되었다. 1960, 70년대 무형문화전문가 집단은 양으로도 작았으며, 그나마 소수의 전문가가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면서 무형문화정책을 독점하였고, 독점의 피해는 20세기말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의 마을단위 민속의 현실도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내무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전통문화의 파괴와 문화부서의 문화재보호라는 무형문화재정책은 상반되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개발과 전승이란 양립할 수 없는 이중적 잣대가 제3공화국만큼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지난 20세기 후반은 무형문화 담당주체 가운데도 신문화권력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무형문화 정책 초기에는 국가에서 지정을 시켜 그나마 단절에 빠진 다양한 무형문화를 위기에서 구출하자는 ‘위기구출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나마 국가지정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어떤 명예권력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직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반세기에 육박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신문화권력이 탄생하였다.

신문화권력은 문화자본화하였으며, 자본의 힘이 권력을 재장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술을 빚는 한 명의 장인이 국가문화권력에 의하여 국가지정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치자. 그 말고도 다른 명품술이 있었으나 이상스러울 정도로 그만이 지정된다. 여기에 국가문화권력(관료와 문화재위원을 포함한)이 개입한다. 그는 전통술의 맥은 이어받되 실제로 전통술 제조법은 시행하지 않는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술’이란 명칭은 술의 상품력을 보장해주며, 그는 기업화한 별도의 공장을 운영할 뿐이다. 그가 돈을 벌었다면, 그가 축적한 자본의 힘은 무소불위로 자신의 문화권력을 지키는데 쓸 뿐이다. 똑같은 실력이 있었으나 지정이 되지 못한 다른 명품술은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되어 소멸되는 반면에 독점적인 신흥 문화권력이 형성된다.

어디에도 정작 ‘민중’은 없다. 민중의 예기능이 현대적 귀족문화로 고급화되어어나가고 있으며, 정작 민중은 판아메리카나의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신문화권력의 탄생은 어디까지나 국가문화권력의 선택권에 의하여 좌우될 뿐, 민중의 문화창조 의지와는 무관하다.

이제, 국가권력이 20세기 후반에 전통문화전승이란 문화정책을 수행해온 결과에 대하여 이제는 엄정한 역사적 판단을 내려야할 시민사회로 우리사회도 돌입하였다.

Ⅲ. 세계화와 통일문화에서의 전통

1. 세계화의 에스닉의 양면성

우리 문화의 확산과정은 이미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부터 필요성이 예견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우리문화의 위축에 위기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온 탈춤 부흥운동 등은 우리문화 확산의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70, 80년대는 이른바 사회과학이 지적자산을 강점하는 양극의 시대였다. 따라서 우리문화는 사회과학적으로 좌우를 가르는 양극에서 더 이상의 대중적 진출을 감행할 토양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의 시작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변화된 국제정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으로부터 인문학으로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인문학으로의 사고전환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물론 자본의 총량에 비하면 자본재로 환산한 우리 것의 몫은 지나치게 작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본디 작은 것이다. 오늘의 자본의 총량이 인간생활에 불필요할 만큼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총량이 더욱 작아보이는 것이다.

변화는 극적이기도 하다. 국제자본의 공세가 거듭되는데도 우리 영화의 대중적 진출은 실로 눈부신 바 있다. 서세동점하는 100년 전의 세계화시대(기실은 식민주의화시대) 이래로 제2의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1세기의 문화지형도는 분명히 변하고 있다. 세계자본의 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지한 측면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반가운 것이다. 우리는 100여 년 만에 우리 문화가 모처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이 어려운 변화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문화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20세기를 마감하는 순간, 때마침 한국의 문화부는 문화산업론을 주창하여 국제화시대의 문화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입해서 들여오는 문화에서 밖으로 내다 파는 문화를 내걸은 셈이다. 달러위기를 경험하면서 ‘돈’이라는 화두가 문화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돈’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고,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돈’이 안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의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영상·게임 등 돈되는 상품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다. 전통문화는 문화부국을 가져올 수 있는 밑받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론의 중심에 여전히 '우리'는 없다. 영상 등에 주인자리를 빼앗기고 우리문화는 걸다리로 끼어들거나 여전히 찬밥신세다. 따라서 오늘의 문화산업론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면서도,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다. 왜 문화산업론의 중심에 우리문화를 놓지 않으려는가?

20세기말, 우리 나라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부르게 '세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자마자 초국적·다국적 금융자본에 '갑자기' 포획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한 사태가 빌미가 되었음직한 문화산업론이 우리문화를 중심에 내세우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세계화논리의 헤게모니장악에 문화마저 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지구촌형성과 상호의존 확대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생활양식, 지역경제를 초국적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과정에 획일적으로 통합시킬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불균등한 발전은 더욱 확대되고 생태적 파괴는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가속화될 우려가 깊다.

세계화(미국화)는 양면성을 지닌다. 세계화는 획일적 문화의 보편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각 민족 특유의 문화예술, 먹거리 등이 인기를 얻게되는 양면성도 지닌다. 에스닉붐(Ethnic Boom)으로 토속문화의 상품적 변별성이 나타나거나 느닷없이 복고풍이 되살아나는 측면도 있다. 세계화는 세계문화를 필연적으로 세계적 거대상품으로서의 판아메리카나문화권으로 단일화시키면서, 동시에 각개 '에스닉'을 차별상품화시키는 결과를 빚는 탓이다. 에스닉은 고유성을 간직하되, 전통적 의미에서의 고유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제거래품명으로서의 에스닉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가령 일본내에서 오끼나와 민요에 기초를 둔 류쿠음악의 선율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오까나와 음악인의 콘서트가 일본 본토 각 지역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다. 뱀의 가죽을 붙인 샤미센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야마토가 늘고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방문에서 김치를 사들이는 붐도 일종의 에스닉 붐이다. 세계

문화의 꽃밭은 빨강꽃, 파랑꽃, 노랑꽃 같은 백화가 만발한 꽃밭이지, 단일 빛깔의 꽃밭으로 이루어진 꽃밭은 평화의 꽃밭이 아니다.

2. 북한에서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전통 재점검

민족분단 이후, 남과 북이 헤어져 살아온 지 반 백 년이 넘었다. 같은 민족이 내부교류도 없이 50여 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 그러함에도 엄혹하게 격리된 조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적인 특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각각의 생활 속에 전통문화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향후 내부통합의 공통분모 확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적인 문화적 전통성이 이어지고 있다면 민족사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북에는 ‘전통문화’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인 민족문화, 혹은 민족적 양식, 민족문화유산, 민족생활풍습 같은 용례를 쓰고 있다. 이북에서는 전통문화라는 말이 함의하는 북고주의적 경향을 경계한다. 따라서 문화전통 혹은 민속전통 따위는 사용하지만 전통문화란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북에도 이남식의 전통문화적인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체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동안 이북문화를 연구하는 이들이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전통문화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이 존재하여 왔다. 전통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방대한 책을 서술한 바 있는 게임브리지대학의 에드워드 쉴즈 교수는 이를 간단명료하게 ‘전통에 대한 사회과학의 우매함’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의 논지를 대략 요약해보면 이북문화 이해방식에서도 생각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현대의 사회과학은 헬라 - 로마의 고대로 소급해야하고, 전통을 갖고 있으나 계몽주의 전통에 의존하여 왔다. 계몽주의로부터 전통에 대한 회의적 태도와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개념을 전수했다.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자는 전통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요즈음 사회과학에서 팽배하고 있는 견해는 전통이 비현세적 개념에 감추어져 손실된 사회구조의 한 측면이라는 것

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역사적 요소’로 되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설명적 개요에서 전통을 누락시키며 전통과 대면하기를 꺼린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전통을 하나의 잉여부분으로 취급하며 지적 장애물로 보면서 제쳐놓고 만다. 그러나 전통의 탁월성과 그의 심오한 영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사회과학자들이 전통을 등한시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것은 사회과학자들이 발전시킨 문화의 일반적 취향 때문이다.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회과학자들은 전통이 퇴보와 극보수성과 연고나 되고 있기 때문에 증오했다. 그들은 현대사회가 전통없는 상태에서 ‘이해 관심’과 ‘권력’에 따른 행동으로 지배된다는 천박한 견해를 따르며 때로는 과잉동조했다. 그러나 역사가나 인류학자들도 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다. 현대로 접어들면 들수록 그들은 전통의 영향력을 더욱 적게 느끼고 현대사회과학의 용어 사용의 과오를 답습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념, 관행, 제도의 영역을 담고있는 전통은 여타의 것들로 용해되어 버렸다.

셀즈의 분석들은 이북문화를 분석하는 데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북은 충분히 전통적인 사회로 여겨진다. 본 리포트는 이북을 지극히 전통적인 사회로 규정지으면서 논지를 펴고 있다. 물론 이북을 ‘전통적인 사회’로 규정짓는 함의는 보다 복잡한 설명이 뒤따른다.

1) 일상성과 보편성

평양감사가 거처하던 평양성답게 평양에는 1급 지방관아의 격에 어울리는 관속(官俗)이 존재했다. 개성의 양반집에서 향유되던 수준 높은 귀족적 문화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 문화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대중의 수준에서는 역시 격이 높을 뿐이다. 귀족주의적이고 봉건성이 강한 상층문화적인 전통논의는 본 리포트에서는 논외로 친다. 따라서 보편적인 일반 대중이 향유하던 전통, 즉 민속문화 따위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야한다.

민속문화는 민족생활문화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다. 민족생활문화란 전제 속에는 민족문화라는 포괄적이며 상층적인 함의 보다는 일상의 생활문화라는 일상성·보편성에 입각한다. 민족문화의 포괄 범주가 애매할 정도로 크다면, 생활문화는 민족적 특성을 간직한 보편적인 일상의 문화를 포괄한

다. 민족생활문화는 문화적 본질상으로 지극히 계층편향적인 문화를 일정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남북의 보편적 문화정서로 획득될 수 있는 분야다. 남북의 문화 가운데서 보편성과 일상성이란 각도에서 이어져온 측면이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보아야 한다.

2) 당대성과 현재성

100년 전의 추석풍습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북이나 이남이나 이날을 기해성묘를 다닌다. 차례도 지낸다. 남북에 공히 남아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북과 이남의 추석이 똑같을 수는 없다. 도시집중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결과, 명절날에는 엄청난 인구이동이 수반되고 자본주의식 백화점 세일이 붐을 이루는 것이 이남의 명절풍습이다. 이북의 명절에도 차례는 존재하지만, 유교식의 엄숙함과 제도적 형식을 요구하는 틀은 상당히 변모하였다. 어떤 민족생활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대가 변화면 그 어떤 문화도 변하기 마련이다. 전통이라고 규정한 가치 규범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불변은 없다. 더우기 해방 이후에 줄곧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온 북한의 사회적 조건에서 과거 사회에서의 규범들이 그대로 온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발전경로를 걸어온 남한사회에서도 역시 과거 사회에서와 같은 규범의 민족생활문화는 이미 자기 자리를 잃은지 오래다. 전승이 이루어진 어떤 민족생활문화도 현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민족생활문화는 복고적인 취향만은 아니다. 음식문화에서 여전히 과거에 먹던 김치와 밥을 즐기고 숟가락과 젓가락문화를 향유한다고 하여 아무도 복고적인 문화로 보질 않는다. 일단 생활 속에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생활문화란 극히 현실적이고 당시대적이란 점이 망각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족생활문화에서 당대성의 인정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변화된 조건의 같음과 다름을 상호 인정해야한다.

3) 우성과 열성

이북에서 민요가 대중가요로 자리잡을 수 있음은 민요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남에서도 민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방송에서 방영될 때는 주로 명절날이다. 남쪽 방송의 황금시간대는 역시 10대 취향의 대중가요들이다. 그렇다면 이북의 민요는 남북의 통합이란 측면에서 소중한 문화로 인정된다. 이북에서는 당산제 등을 미신타파라는 이름으로 청산하였다. 이남에서는 마을공동체문화의 일환으로 줄다리기, 당산제 따위가 더러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동체문화는 남쪽문화의 문화상황에서 민족문화의 저수지 혹은 외래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방파제로서 기능한다.

분단의 엄혹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생활문화적인 요소들은 문화적 우성(優性)으로서 그 생명력이 연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서로간에 공통적으로 살아남은 문화적 우성은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른 측면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 도태시킨 문화적 열성이라고 하여 통합과정에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대립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열성이라고 하더라도 통합과정에서 문화적 우성으로 자리바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남에 종묘제례악 같은 특별한 궁중음악이 이어진다. 종묘와 더불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귀족주의적 입장에서 청산의 대상일까? 그렇지않다. 그 자체 민족음악의 보고로 인정된다. 어느 일방의 시각만 가지고는 통일은 어렵다. 문화적 헤게모니의 열성과 우성을 두루 살펴 보면서 통합논의를 전개해야 마땅하다.

4) 문화정치성

어떤 민족생활문화도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가장 탈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민족생활문화적인 요소도 실상 정치적인 측면을 은폐하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이북사회처럼 어떤 목표치를 세워두고 인간적·사회적 개조를 추진해온 사회에서 민족생활문화라고 예외가 아니다. 민속놀이에 대한 보존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거의 굿이나 무당 같은 신적 요소들은 일체 엄금한데서 보듯이 전승과 보존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쪽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민족문화에 대한 방관적 입장을 취하다가 1970년대 이래로 적극적인 개입 하에 '민족문화의 중흥'을 부르짖으면서 관속

(官俗)에 가까운 문예부흥책을 펼쳤다. 돌이켜보면 남북은 공히 정치적 동기에 서 문화전통을 ‘이용’해온 측면이 강하다. 북에서도 혁명전통의 강화 속에서 민족문화의 위상을 주체적 입장으로 정리한 것이니, 남북이 공히 문화에서의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 1)은 남북문화통합의 방향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문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북의 특수한 조건에서 배태된 문화보다도 민족사의 보편성에 입각한 민족생활문화가 통합의 절대적인 기준치로 제시되어야함을 뜻한다.

위 2)는 민족생활문화에서조차 남북의 변화된 조건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통합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위 3)은 남북의 상이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생활문화는 고스란히 통합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수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남북의 상이한 체제로 인하여 약화·소멸되어버린 민족생활문화를 일정 정도 재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령 남쪽에서는 잘 전승된 민족생활문화가 북쪽에서는 단절을 겪었고, 반대 현상도 존재한다. 단절의 이유가 민족사적 견지에서 타당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어느 일방의 이데올로기적 희생물로서 문화적 멸종을 가져왔다면, 응당 통합과정에서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위 4)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민족생활문화도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의 통합방향, 즉 통일민족국가의 체제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규정될 전망이다.

오늘날 이북사회에서 연연이 이어지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들은 문화적 우성으로서 변화발전된 사회적 조건에 부합되게 적응되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마땅하다. 동시에 오늘의 이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요소들도 지극히 ‘현실적인’ 문화임을 말해준다. 현실적이기에 이북사회의 문화건설방략과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다.

IV. 농촌문화전통에 관한 몇 가지 생각

1.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세시풍속

시대가 변하면 세시풍속도 변하는 법이다. 일제식민주의의 혹독한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분단의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남한사회는 미국문화의 지배구조 속으로 침잠되고 북쪽은 사회주의사회로 변화된 결과 세시풍속 역시 변화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민족의 설날은 구정으로 밀려나고 신정이 주인차지 하다가 근년에 들어와서야 온전한 복권을 이루었다. 그러는 동안 민속놀이를 비롯한 아름다운 미풍양속들은 외래문물에 쫓기어 문전 밖으로 나가고 남의 것에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다. 농촌은 피폐해질 대로 상처를 입어서 활기를 잃고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민속놀이들도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설날의 푸근한 정서야 여전하지만 풍습에 있어서 조차 계급적 차이에 따라 상이한 처지를 조성하였다. 동시에 발렌타인데이 같은 국적 불명의 명절이 들어와 초코렛 장사꾼들의 농간에 정작 우리의 명절은 더욱 초라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명절차림과 우리 나라 제축의 전통은 가깝다 못해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농경사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세시명절들은 농업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을 반영하면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중들의 제축의 문화로 자리잡아 왔다. 정초의 설날과 대보름, 한식, 4월 초파일과 단오, 칠월칠석과 백중, 추석, 시월 상달, 동지 등에 이르도록 모든 절기에는 그에 따른 농사준비와 더불어 제축들이 곁해졌다. 우리 나라 거개의 민속놀이들이 대개 이들 세시명절차림의 일환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사회는 바뀌었다. 더 이상 농업이 모든 생업의 주종도 아니거니와 이른바 현대인의 생활패턴으로 보아서도 음력에 기초한 세시명절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시키고 전승하려는 노력들 가운데는 이들 명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월에 이루어지는 인구대이동은 가히 민족명절의 도도한 흐름이 얼마나 지속적인가를 보

여준다.

마을에 따라서는 전래의 우리민속을 잘 보존하여 전승시키고있는 곳도 의외로 많다. 매우 반갑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여러 번 다녀본 전라도의 어느 마을은 약 10여 년 전에 끊겼던 마을 당산제를 최근 년에 다시 복원시켰다. 물론 옛법과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마을곳의 가락도 많이 변하였다. 그러나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장년들이 비교적 많았고, 마을회의가 잘 운영되는 터라 마을의 대소사가 모두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름에는 마을의 동구입구에 자리잡은 모정에서 마을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겨울에는 동네회관에서 마을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마을 역시 양파를 많이 재배하여 큰 피해를 보았고, 몇 차례의 농산물 파동을 겪으면서 수년간 곤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마을 분위기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마을의 문화적 기제들도 온전한 편이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마을을 떠나는 이가 많았으나, 마을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오히려 마을로 되돌아오는 사람까지 생겼다. 객지로 떠난 사람들도 마을 당제를 잡숫는 날이면 되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저마다 가락을 잡아 모처럼 마을 대동잔치가 되고 있다.

윗 마을의 경우는 매우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마을들에 이 같은 현상을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농촌의 피폐상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바에, 힘없는 농민들 보고 마을을 잘 일으키고 농민문화도 제대로 꾸려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외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치일 수도 있다. 그만큼 오늘의 농촌현실이 절박한 탓이다.

민속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시대가 변하면 민속 역시 변하는 것이다. 옛 것 중에서 오늘에 맞지 않고 낡은 것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 가운데도 선진적인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삼아야 옳을 일이다.

세시명절과 제축은 바로 바늘과 실같이 끈끈한 관계이기에 모든 세시의 축소 소멸과 더불어 전래의 제축도 사라진 것이다. 오늘의 사회현상에 알맞은 다양한 제축을 살리려는 노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무게중심의 하나로서 민족전래의 단오같은 명절을 세우려는 노력은 의외로 작은 것도 사실

이다. 죽어버린 전통 - 이는 이미 전통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통은 박제된 고정물이 아니라 거듭 새롭게 정의되고,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향유되면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이 가감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풍습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세시명절 풍습도 변하기 마련이고 이에 수반된 제축들도 변하였다. 따라서 오늘에 타당하면서도 전래의 민족적 문화 전통에 선이 닿아있는 제축을 만드는 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점에서 전래의 세시명절들을 새롭게 정의하여 제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왕 공휴일로 되어 있어서 저마다 하루를 쉬고, 많은 사람들이 연등에 참가하는 사월초파일날도 전래의 문화적 기제들을 새로운 입장에서 복구시켜야 할 까닭이 있다. 단오날도 그네뛰기나 씨름같은 민족경기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난장'을 곁들여서 하는 지역단위의 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국적도 불분명한 '발렌타인데이'같이 '초코렛 장사'들이 개입되고 백화점의 상흔이 파고든 서양의 축제를 들여다가 수선을 피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왕에 있어왔고, 대다수 민중들의 심성속에 자리잡고 있으나 많은 쇠퇴와 영락을 면치 못한 여러 명절들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중요하다. 얼마전에 설날을 복권시킨 뒤로 정초의 민속놀이나 대보름 행사들이 새롭게 부흥해가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눈에 띄었다. 이 점은 명절을 매개로 자리매김한 제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지방화시대와 지역전통문화

시계바늘을 조금 돌려서 전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연 당시의 문화는 거개가 지역문화였음을 실감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통문화의 실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권에 토대를 두었다. 남사당패나 사당패, 솟대쟁이패 등 유랑예인집단이 각지를 떠돌며 연행을 팔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상부문화구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한 문화는 지역적 현실과 처지에 부합되게끔 변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다. 그러나 일제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역전통문화라는 개념은 약화·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바로 지역문화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문화생산력이 극도로 약화된 탓이다.

사회의 제 영역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한, 문화라고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대중매체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일괄 “공급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뾰족한 대안없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만을 부르짖는다고 일거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문화의 지역적 주체성이 강하게 살아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개념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역 자생의 문화를 찾는 노력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문화이다”는 주장이 가능하듯이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통문화들의 거개가 지역적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가령, 김치는 한국인이 발명한 매우 뛰어난 발효식품으로 전국 어디서고 김치를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김치맛이 획일적으로 같다면야 매우 무미건조한 식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지역적 현실 속에서 젓갈을 주재료로 한 김치도 나오고, 백김치도 나와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김치는 똑같은 김치되 맛은 모두 다른 김치로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김치라는 점에서는 전국의 김치문화가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이다.

새삼스레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지역전통문화라는 과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전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수없이 있어 왔다. 문제는 각 지역에서의 지역문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주체들이 약했다는 점이다. 가령, 오늘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역문화제라는 현장을 찾아가 보면 어디서나 으레 끼어드는 레퍼토리를 늘어놓기 식의 구색 맞추기 문화제가 대중을 이룬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라는 장치를 통하여 발굴된 지역전통문화가 다수 있지만, 바로 그 지역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전래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이입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도 있으나 기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도래와 더불어 전통문화 분야에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역 고유의 성격”을 지닌 문화를 옹계 세워나가는 일이다. 이 점은 “지역의 유구한 전통에서 비롯된 민족문화적 형식”을 기초로 해서 “지역적 삶의 현실을 그리는 내용”을 결합한다는 대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제주도 사람들이 전통문화 분야에서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주도 전래의 생활과 풍습에 기초를 둔 문화를 세워나가면서 이를 전승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에 기초하여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창작을 생산해내려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전통문화를 옹계 세우는 노력은 여전히 긴급을 요하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다시 복원시킨 많은 전통문화들 조차 소멸 변질을 거듭하고 있다는 저간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래의 전통문화들 역시 급격한 변화의 물줄기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들을 정리하고 지표를 만드는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중앙의 문화기관들이나 지역 소재의 대학연구기관, 각 군단위 문화체계가 잘 결합하여 다양한 민족문화유산 지표조사보고가 다수 나오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지표조사들이 충분한 양은 못된다. 현재 이 시점에서 많은 지역의 민족문화유산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들도 그대로 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의 중심축을 세우는 노력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실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살아오면서 현실의 자기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담보되어 지역사회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현재 각 지역에 마을단위로 남아있는 마을의 전통문화들 중에서 여전히 많은 잠재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현재도 전국 어디서고 마을곳은 다수 실제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장승, 솟대, 당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복합문화체와 마을풍물패의 존재는 현재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일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지역전통문화에 주는 의미도 지역의 산적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주목받지 못한’ 지역문화 자산도 잘 이해하여 문화적 자생력을 세우는데 일조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의 승패는 비단 정치와 경제에서의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지역문화를 옹기 세우려는 노력에 주어진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중에서 전통문화만이 지역문화의 모든 중심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혀 자기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문화가 맥을 못춘 채, 전국의 획일적인 문화를 가져다가 동어반복하는 지역문화는 무언가 ‘뿌리 없는 문화’라고 단언을 내릴 수 있는 탓이다.